

# 항소심 '온정 감형' 관행 없앤다

### ■ 대법원, 전국 첫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

## 1심 양형 판단 존중... 파기율 줄이기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선고 형량을 감형해주는 '고무줄 양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주고 법원·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법부 사상 처음 열린 이 회의에는 서울고법 및 서지서 부장판사를 비롯, 전국 5개 고법과 18개 지법의 형사항소심 재판장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1심 판결 파기는 온정주의적 양형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 심리 과정에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는 이상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항소율이 10~19% 가량, 1심 파기율이 9~16%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1심 합의사건 항소율은 56%, 파기율은 46%로 절반 가까운 사건이 항소·파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 과도한 양형 파기를 지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사소한 법령의 오기나 공소장 변경, 병합 심리 등의 경우 불필요한 직권파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기 기준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을 때, 법리 적용이 잘못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법다'는 양형부당이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형사항소심은 사실과 양형 등 1심 판단을 전면 재심사함으로써 외국에 비해 높은 파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정주의적 양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존중하고 감형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1심 재판장이 된 부장판사 143명이 참석한 '형사재판장 연수'를 열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응담 대법관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선고, 구두변론이 상당 부분 생략된 재판 절차, 서류 중심의 예속된 형사재판 등을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꼽은 뒤 "고심 없이 적당판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양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 항소심의 감형이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항소를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선고가 최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양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형사 항소심 재판장 회의에서 참석한 재판장들이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야생동물섬 개발 더 신중을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전남도가 '섬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야생동물 복원공원'과 '원숭이·낙타섬' 조성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논란이 거열되고 있다.

전남도는 신안군 도초도에 600만여 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동물 복원공원'을 조성하고, 인접한 안좌면 상사치도에 26만 평 규모의 '원숭이·낙타섬'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이같은 구상은 "올타리에 가꾸어주고 보는 기존의 동물원 개념을 탈피, 섬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동물의 서식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방사해 먹이사슬에 의해 공존하는 '생태환경적 사파리(safari) 개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4천600여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멸종위기기에 처한 토종 야생동물에 대한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목표에서 벗어날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상 위치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배후 관광지 부재 등 여건이 열악한 실정에서 경제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관광자원 적합성 여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반겨야 할 해당지역 주민들마저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섬에 인공적으로 사육·증식된 동물을 방사했을 경우 방사동물이 그 지역에 적합한지, 생존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와 잠재된 생태계 교란과 훼손의 위험성은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토종' 야생동물 복원은 지리산 반달곰 사업에서 보듯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다.

타산이 적으로 삼을만한 비슷한 선례로 여수 금오도 꽃사슴 방사를 들 수 있다. 지난 2004년 6월 여수시는 남면 금오도에 사육된 꽃사슴 19마리를 풀었다.

금오도가 조성 후기 왕실의 사슴목장이었다는 역사성을 들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립공원 안에 외래종 방사가 금지돼 있다'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제지와 '생태계 파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그러나 시는 8개월여가 지난 뒤 다시 꽃사슴들을 잡아들이야 했다. 기대했던 만큼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사업은 전남지역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분야다. 그러기에 이번 사업은 근시안적 관광상품이 아닌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한 뒤에 추진돼야 한다.

/song@kwangju.co.kr

## '2·13 합의' 했지만

### 북핵 해결 반신반의

국내 외국인 여론주도층 설문

북핵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외국인 여론 주도층은 한국 이미지 제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북핵 문제를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은 "이달 9~23일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주한 외교사절 등 외국인 여론 주도층 254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1%가 북핵문제를 최고의 걸림돌로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북핵 다음으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38.6%)이란 의견이 많았고 '정치적 불안'(7.5%), '정체된 IT 강국 이미지'(1.6%)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기업 CEO 등 비즈니스 종사자(78명)들은 '사회적 불안'(47.4%)을 '북핵문제'(39.7%)보다 더 큰 걸림돌로 보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국 이미지 제고의 디딤돌'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4.5%가 '반기문 UN 사무총장 선출'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국제행사 유치 노력(22.1%), '남북관계 개선'(11.4%), '한류'(7.5%) 등 순이었다.

## ■ 시민단체, 광주시장·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

### 재원 확보 불투명... 헛공약 많았다

민선 4기 광역대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기초단체장의 공약이 재원조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 대체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광주 경실련 내 '민선 4기 2006년도 하반기 공약 평가단(단장 황인창, 조순대 경영학부)'이 26일 발표한 광주시장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민선 4기 공약 이행 평가'에서 드러났다.

◇광주시장=평가단은 13만4천여 일자리 창출 등 10개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 LED 밸리 조성 및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어린이 복합 도서관 건립 공약은 재원 조달 구체성을 띠고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3만4천여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일자리 개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적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문화산업 콤플렉스 조성 및 로봇 산업 육성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공약은 매년 400억~500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방안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동구청장=평가단은 공직품목 쇠퇴와 지원동 공동주택 조성, 공공기관 공원과 등 10개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기관 공원과 사업과 장학재단 설립 공약은 재원 조달의

구체성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구청장=공공 탄약고 이전 부지 활용과 비즈니스 호텔 공약의 경우 헛공약으로 분류됐거나 특정 시비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구정 혁신단 운영과 아동 복지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공약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청장=평가단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 교목문화 활성화 등 10개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며 평가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효사랑 브랜드 활성화 사업과 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청장=평가단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공약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첨단 산업 단지 2단계 사업과 북구 종합 문화센터 등 10개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의미 없는 공약이 많았다고 평했다.

◇광산구청장=평가단은 주민참여기본 조례 제정과 민속박물관 조성 등 10개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집적화단지 조성 및 완성차 물류 시스템 구축 공약은 자치구 여건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영유아 보육 정책과 장애인 편의 시설 확보 공약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관련 사실

### 절반이 노무현대통령 겨냥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관한 주요 신문의 사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사실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노 대통령은 정치적 공격에 대해 주로 '논리적 설득'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귀혜씨가 발표한 박사 논문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한 방어 메시지의 수사전략 연구'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조순·동아·한겨레 등 3개 일간지에서 198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거론된 사실 수를 집계한 결과 노 대통령을 겨냥한 사실이 전체 881건 가운데 50.9%인 448건을 차지했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1년 더 남은 점을 고려해 연간 노출 빈도를 계산하면 노 대통령은 112건이 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36.8건으로 뒤를 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 28.8건, 김영삼 전 대통령 21건 순이다.

이씨는 대통령들의 대국민 설득 방법을 대통령의 신념 및 처신과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에토스', 이해·신뢰·동정·실망·분노 등 감정에 호소하는 '파토스', 그리고 증거 제시와 논리성을 중시하는 '로고스'로 나눠 적용했다.

그 결과 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3명과 달리 '로고스'를 주로 사용했으며 부정비리, 인권, 외교, 국정 종합, 정치 불안, 인사·조직 등 거의 모든 이슈에 걸쳐 이 방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노 정권이 '국민과의 인식차를 좁히지 못하고 설득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대중에게 강한 정책적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로고스'를 부각해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배터리덕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리튬이온 배터리,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리트자이나 中国語学院... 3월 5일 개강... 233-9582